

FIP-2014-0004 (통권 제203호, 2014. 09.30)

민간소비 부진의 6大 원인 및 시사점

ISSUE
PAPER

Contents

< 요약 >

I. 검토배경	1
II. 최근 민간소비 동향 및 문제점	2
1. 최근 민간소비 동향	2
2. 민간소비 위축의 문제점	4
III. 민간소비 부진 지속의 원인	6
1. 가처분소득 감소 ① : 가계부채 증가	6
2. 가처분소득 감소 ② : 고용부진 및 영세 자영업자 증가	7
3. 가처분소득 감소 ③ : 비소비지출 증가	8
4. 가격 상승 ① : 전·월세가격 상승	9
5. 가격 상승 ② : 교육비·의료비 상승	10
6. 소비심리 위축 : 고령화	11
IV. 정책적 시사점	12
< 참고문헌 >	13

-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·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.
- 이 자료는 본회 경제정책팀 박아련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.
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TEL : 02-3771-0432 FAX : 02-6234-5306 E-mail : arpark@fki.or.kr

● ● ● 요 약 ● ● ●

-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민간소비와 GDP 규모 간의 괴리가 점차 확대
- GDP 중 민간소비 비중은 90년대 60% 수준에서 '10~'13년 사이 50% 초반대로 하락하고 실질소비 증가율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

< 민간소비 부진 지속의 원인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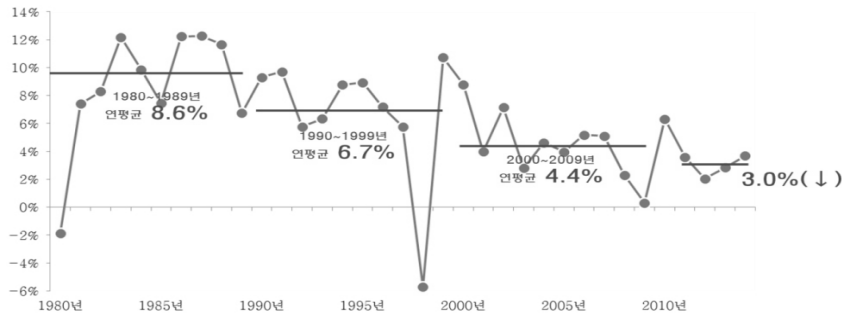
	No.	원인	내용
가처분소득 감소	1	가계부채 증가	○ 가계부채는 '13년 말 기준 1021.4조 원, 명목 GDP 대비 71.5% ○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부담이 가중될 경우 소득 증가가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부채상환에 사용
	2	고용부진 및 영세 자영업자 증가	○ 단기 근로자 및 고령층 위주의 일자리 증가로 소득개선 효과 저조 ○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의 자영업 진출로 영세 자영업자 증가
	3	비소비지출 증가	○ 사회안전망의 보강으로 가계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율 상승 (17.0%('03)→18.9%('13)) *비소비지출: 세금,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, 가구 간 이전, 비영리단체 이전, 이자비용
가격 상승	4	전·월세가격 상승	○ 전·월세가격이 물가상승률을 장기간 큰 폭으로 상회 ○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정성 확대, 거주비용 상승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비심리 위축에 영향
	5	교육비·의료비 상승	○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 ○ 의료비 지출액 상승 속도('03~'13년 10년간 연평균 5.3%)가 가처분소득 증가 속도(연평균 4.5%)를 크게 상회
소비 심리 위축	6	고령화	○ 고령화에 따른 은퇴가구가 증가하면서, 고령층의 보수적 소비성향이 전체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○ 은퇴 및 노후 불안심리 확산으로 소비위축 심화

-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억제 및 기존 부채의 축소조정 유도를 통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여 소비위축 완화
-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담당하되, 정부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규제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역할 담당
- 투자 증대 → 고용창출 → 소득개선 → 소비증진 → 시장확대 → 투자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 필요

I. 검토배경

□ 1980년대 연평균 8~9%대의 성장을 보이던 우리경제는 불과 20여년 만에 2~3%대의 성장률을 기록,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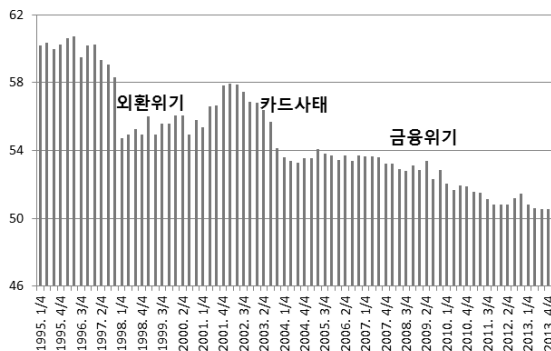
< 국내총생산(GDP)성장률 추이 >



주: 2013~14년은 IMF 추정치
자료: IMF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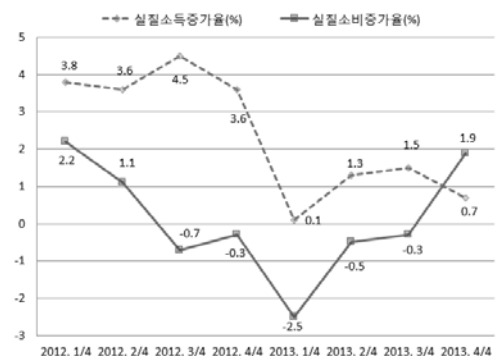
- 특히 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가 침체 현상을 보여 GDP 중 민간 소비의 비중이 하락하고, 실질소비 증가율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
 - GDP 중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대 60% 수준을 나타냈으나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'10~'13년 사이 50% 초반대로 하락
 - 실질소비 증가율은 '12년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

< GDP 중 민간소비 비중 추이(%) >



자료: 한국은행

< 실질소득 증가율 vs 실질소비 증가율 >



자료: 통계청(전년 동기 대비)

-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 및 주요 여건 검토를 통해 민간소비의 흐름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효과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
 - 소비 등 내수기반이 위축될 경우 환율, 유가 등 대외충격에 대한 경제의 흡수 여력이 약화되고 고용개선도 제약될 우려
 -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민간소비 동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, 민간소비 부진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Ⅱ. 최근 민간소비 동향 및 문제점

1. 최근의 민간소비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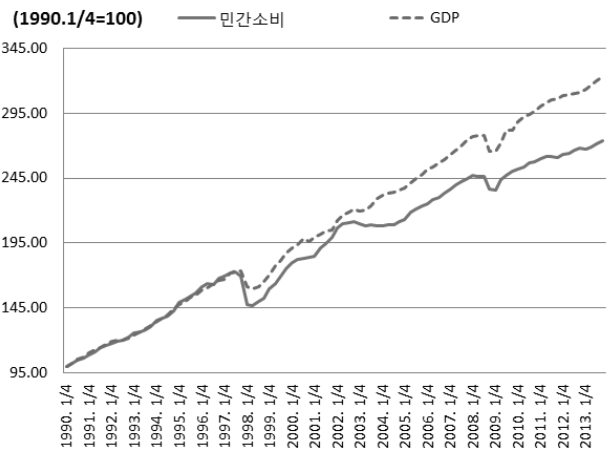
- 최근 민간소비는 낮은 신장세와 더불어 국민소득(GDP)과도 괴리되는 모습
 - '11년 4/4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1%대의 극히 낮은 수준에 고착
 -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, '08~'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두드러짐
 -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민간 소비와 GDP 규모 간의 괴리가 점차 확대

< 최근의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(%) >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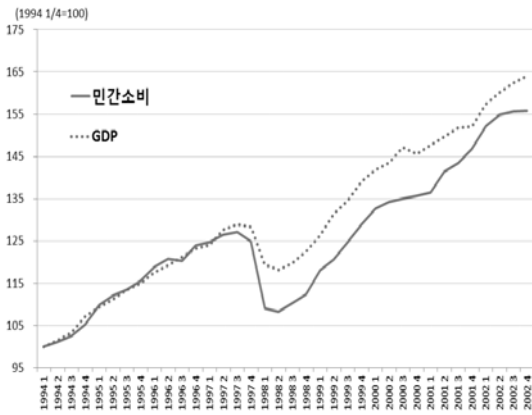
< 민간소비와 국내총생산 규모 비교 >



자료: 한국은행

-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기간은 경제개발 이래 가장 길며, 과거 경제위기의 경우와 달리 지속적 양상을 보임
 - '07년 4/4분기 이래 최근까지 24분기(6년) 동안 단 3분기*만을 제외하고 민간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
 - * '09년 2/4분기, '12년 3/4분기 및 4/4분기
 - 과거에도 '97년 외환위기 기간과 '03년 신용카드 사태 당시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였으나 최근의 지속적 동향과는 차이가 있음
 - '97년, '03년 당시에는 1~2년 후 경제위기의 여파가 일부 해소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에는 민간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

< '97년 외환위기 전후 민간소비 동향 >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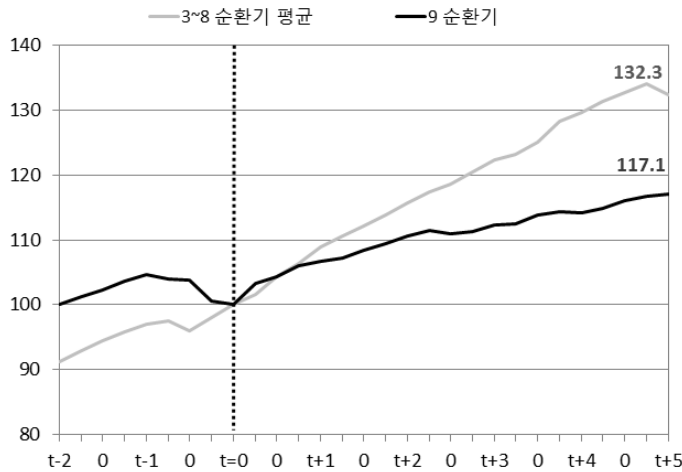
<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민간소비 동향 >



자료: 한국은행

- 최근 민간소비는 과거 경기변동과는 달리 부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, 경기적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암시
- 최근 경기순환기의 민간소비 회복 정도는 과거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
 - * 과거에는 경기변동이 저점을 통과한 이후 5년 사이에 민간소비가 약 32.3% 증가
 - * 최근 경기순환기에는 저점 통과 이후 5년 동안 민간소비가 17.1% 증가하는 데 그침

< 민간소비 회복세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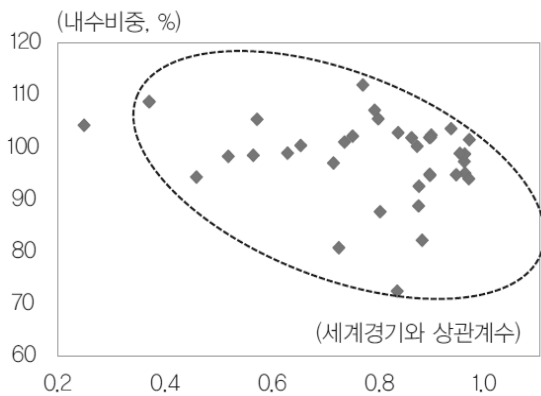
주 1: 경기변동 저점(t=0)의 수치를 100.0으로 환산, t+5는 저점 통과 이후 5년 후
 주 2: 제3~8순환기(1980년 9월~2005년 4월), 제9순환기(2005년 4월~2009년 2월)
 자료: 통계청

2. 민간소비 위축의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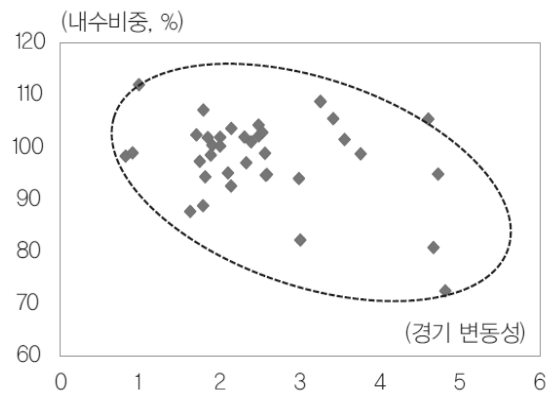
1) 거시경제의 변동성 확대

-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거래의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 내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위축되면 국내경제가 해외 충격에 취약해져,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이 증가
 - 40개 주요국¹⁾ 분석 결과, 내수비중이 낮을수록 세계경기와의 상관계수가 크게 나타나 대외경제 충격에 대한 동조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
 - 또한 내수비중과 경기변동성 간에도 음(-)의 상관관계를 보여, 내수비중이 낮을수록 경제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

< 내수비중과 세계경기와의 상관계수 >



< 내수비중과 경기변동성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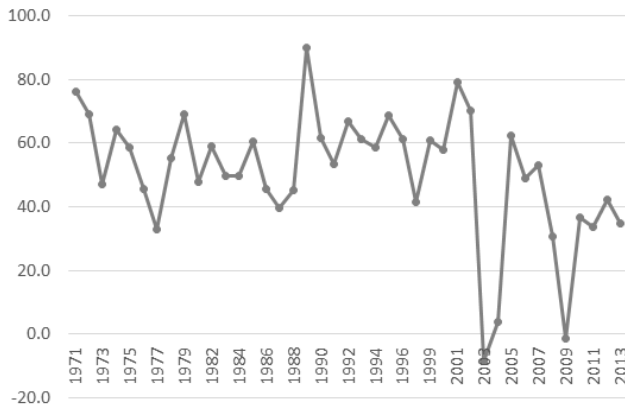
주 1: 대상기간: 2000~2010년, 내수비중은 2010년 기준
 주 2: 경기변동성: GDP 성장률의 표준편차로 측정
 자료: IMF, 한국은행 추정(BOK 경제리뷰 2013-4호)

2) 장기적 성장잠재력 약화

- 민간소비가 위축되면 그 자체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
 - 민간소비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은 '70년대에는 평균 57.5%를 기록했으나 '00년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성장기여율은 평균 38.9%에 불과

1) GDP 규모순(2010년 기준): 미국, 중국, 일본, 독일, 프랑스, 영국, 브라질, 이탈리아, 인도, 캐나다, 러시아, 스페인, 호주, 멕시코, 한국, 네덜란드, 터키, 인도네시아, 스위스, 사우디아라비아, 벨기에, 폴란드, 스웨덴, 대만, 노르웨이, 이란, 오스트리아, 아르헨티나, 남아프리카공화국, 타이, 덴마크, 베네수엘라, 그리스, 아랍에미리트, 콜롬비아, 말레이시아, 핀란드, 싱가포르, 이스라엘, 포르투갈

<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 추이(%) >



<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 평균 >

기간(연도)	민간 소비의 성장기여율(%)
1971~1979	57.5
1980~1989	54.2
1990~1999	59.3
2000~2013	38.9

주 1: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1980년, 1998년은 미포함

주 2: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(%) = $\frac{(\text{당해년도 민간소비} - \text{전년도 민간소비})}{(\text{당해년도 GDP} - \text{전년도 GDP})} \times 100$

자료: 한국은행

- 최근의 소비부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경우 2020년의 잠재성장률은 0.2%p 하락할 것으로 추정, 반면 소비부진이 지속적일 경우 잠재성장률은 0.6%p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(삼성경제연구소, '12)

Ⅲ. 민간소비 부진 지속의 원인

1. 가처분소득 감소 ① : 가계부채 증가

-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서방선진국들은 신용축소 정책기조(deleverage)를 유지한 반면, 우리나라는 내수 진작 및 주택시장 활성화, 자영업자 급증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도달
 - 가계부채*는 '13년 말 기준 1021.4조 원으로 명목 GDP 대비 71.5%에 달함
 - *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
 - 특히, 가계부문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'12년 말 163.8%로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
 - * 영국 150.9%, 일본 128.8%, 미국 114.9%, 프랑스 104.5%, 독일 93.2%(OECD평균 134.8%)
-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부담이 증가할 경우 향후 소득 증가가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부채상환에 사용되어 소비부진이 더욱 길어질 가능성
 - 가계부채(가계신용/GDP) 증가세에 따라 상환부담이 가중되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하회하는 데 영향을 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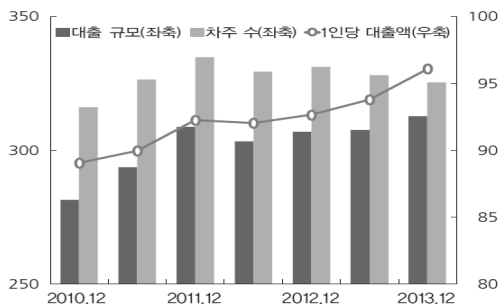
< 가계신용/GDP비중, GDP성장률, 민간소비 증가율(%) >

구분	2002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
가계신용/GDP	61.0	58.2	56.4	59.0	62.8	63.8	65.5	67.4	66.6	68.7	70.0	71.5
실질GDP성장률	7.4	2.9	4.9	3.9	5.2	5.5	2.8	0.7	6.5	3.7	2.3	3.0
민간소비 증가율	8.9	-0.4	0.3	4.4	4.6	5.1	1.4	0.2	4.4	2.9	1.9	2.0

주: 가계신용 = 가계대출 + 판매신용
 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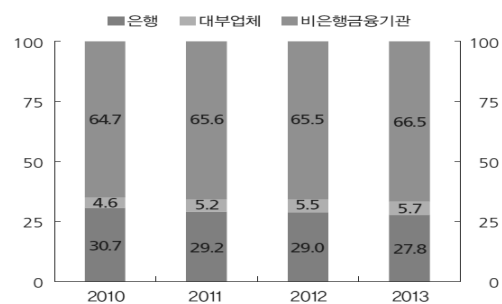
- 특히 가계대출 확대과정에서 다중채무자 및 제2금융권 대출의 확대로 인해 고금리 대출비중이 증가하는 등 부채의 질도 악화
 - * 특히 저신용자의 비은행권·대부업 대출비중이 증가(비은행권: 64.7%→66.5%, 대부업: 4.6%→5.7%)

< 다중채무 금액, 다중채무자 수, 다중채무자 1인당 가계대출액(조 원, 만 명, 백만 원) >



자료: 한국은행, 금융안정보고서 '14

< 저신용자의 업권별 가계대출 비중(%) >



주: 저신용자: 신용등급 10등급 중 7~10등급
 자료: 한국은행, 금융안정보고서 '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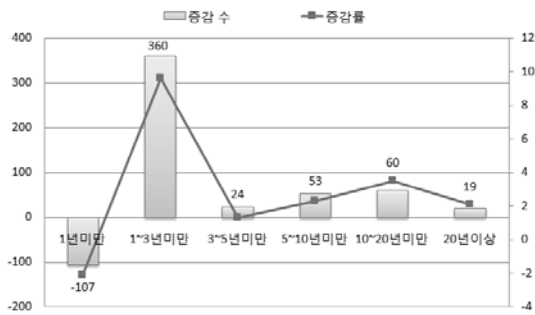
2. 가처분소득 감소 ② : 고용부진 및 영세 자영업자 증가

□ '10년 이후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, 가계 구매력 약화 및 소비부진을 야기하는 주요인으로 지목

- '11년과 '12년 임금근로일자리는 각각 53.3만 개(3.8%), 40.8만 개(2.6%) 증가하여 외형상 고용상황은 개선된 듯 보이나 고용 증가가 단기 근로자 및 고령층으로 이뤄져 소득개선 효과는 저조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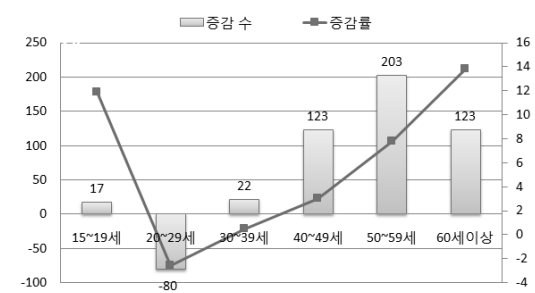
* 근속기간은 '1~3년 미만', 연령대는 50대의 일자리 증가 수 및 증가율이 가장 큼

<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일자리(천개, %) >



자료: 통계청, '12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

< 연령대별 임금근로일자리(천개, %) >



자료: 통계청, '12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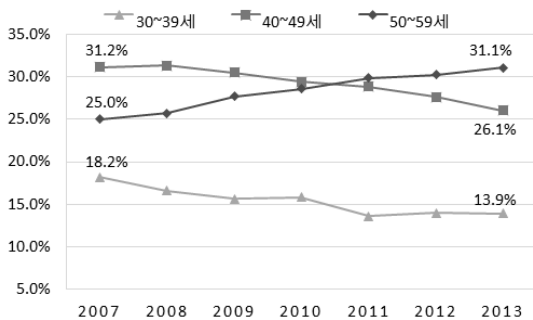
□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증가하여 가계소득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킴

-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중 50대 비중은 '13년 말 현재 31.1%를 차지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

* 50대 자영업자는 153.1만 명('07) → 178.6만 명('13)으로 증가했는데, 이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115.3만 명('07) → 130.9만 명('13)으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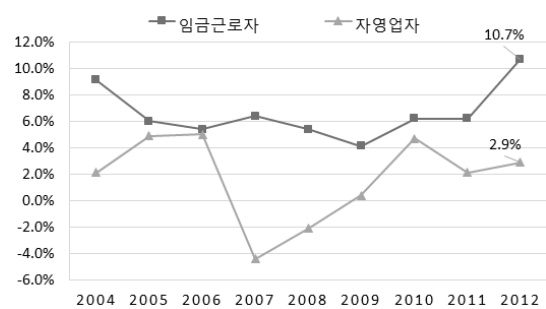
- '12년 말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중위값(mean)은 4,000만 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(5,000만 원) 대비 80.0%에 그쳐 상대적으로 소비여력이 낮음

< 자영업자 연령별 비중추이 >



자료: 통계청

< 자영업자 및 임금근로자 소득증가율 >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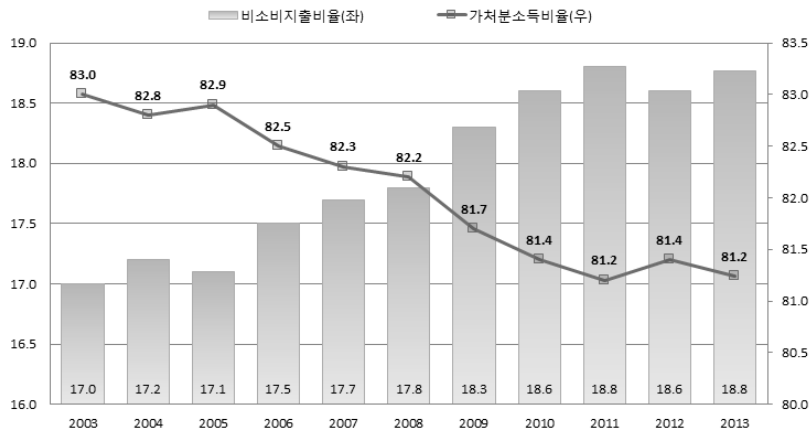
3. 가처분소득 감소 ③ : 비소비지출 증가

□ 세금·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 부분의 부담증가는 가계소비여력 감소로 이어짐

-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의 보강으로 가계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율이 지난 10년간 17.0%('03)→18.9%('13) 수준으로 상승하여 가처분소득비율이 83.0%('03)→81.1%('13)로 하락한 것과 대조적

* 비소비지출: 세금,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, 가구 간 이전, 비영리단체 이전, 이자비용

< 가계소득 대비 가처분소득 및 비소비지출 비율 >



주: 비소비지출 비율= 비소비지출/소득,
 가처분소득 비율= 가처분소득/소득
 자료: 통계청

- 4대보험 관련 부담률 증가, 연금가입 확대,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증가, 고용 확대에 따른 경상조세의 증가로 '03~'13년간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74.7%를 기록, 가계소득 증가율 58.2%를 상회

* 국민건강보험료율: 5.64%('11) → 5.80%('12) → 5.89%('13) → 5.99%('14)

* 실업급여보험료율: 1.1%('13년 7월 이전) → 1.3%('13년 7월 이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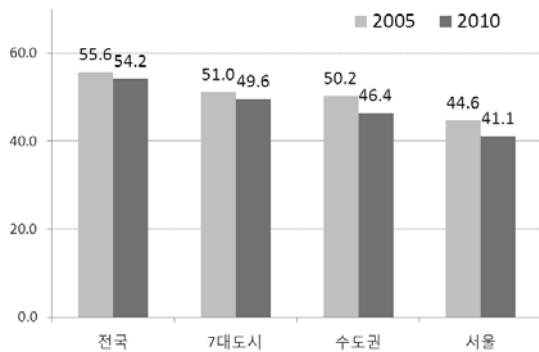
* 세부 항목별로 '03~'13년간 증가율: 사회보험(130.9%), 이자비용(114.2%), 경상조세(113.0%), 연금(84.3%), 가구 간 이전(47.5%), 비영리단체 이전(35.1%), 비경상조세(24.9%)

- 복지정책 확대기조에 따라 사회보험분야 지출 확대 추세가 지속될 전망

4. 가격 상승 ① : 전·월세가격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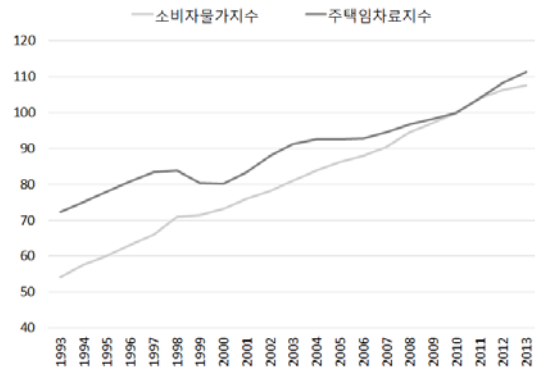
- 최근 부동산가치 하락과 전·월세가격의 인상은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정성을 높이고, 향후 거주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비심리 위축에 영향
- 전국적으로 자가점유비율이 하락하는 가운데, 전세 및 월세 거주비율이 확대되면서 전·월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, 물가상승률을 장기간 큰 폭으로 상회
 - * 자가점유율은 '05년에서 '10년 동안 전국적으로 1.4%p 감소, 특히 수도권과 서울에서의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(각각 3.8%p, 3.5%p 감소)
- 주택임차료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를 넘어서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확대 고착화

< 자가점유율(%) >



주 1: 7대 도시: 6개 광역시와 서울
 주 2: 수도권: 서울, 인천, 경기
 자료: 통계청, 인구주택총조사(5년마다 조사)

< 주택임차료지수(p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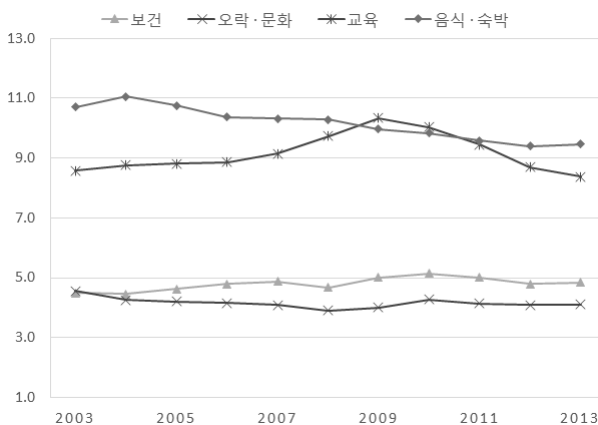
주: 2010년 100을 기준
 자료: 한국은행

- 경기가 장기 저성장 기조로 돌입한 가운데 주택 실수요자층이 감소하면서 주택 시장은 이미 구조적으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
 - * 서울 부동산 매매지수는 '11년 4월 이후 '13년 중반까지 전월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, 전세가격은 '10년 이후 전국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가 지속
- 매매가 하락과 거래부진으로 매도차익실현이 어려워지면서 담보대출 상환에 부담을 겪는 하우스푸어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이들의 소비 성향은 극도로 보수화될 수밖에 없음

5. 가격 상승 ② : 교육비·의료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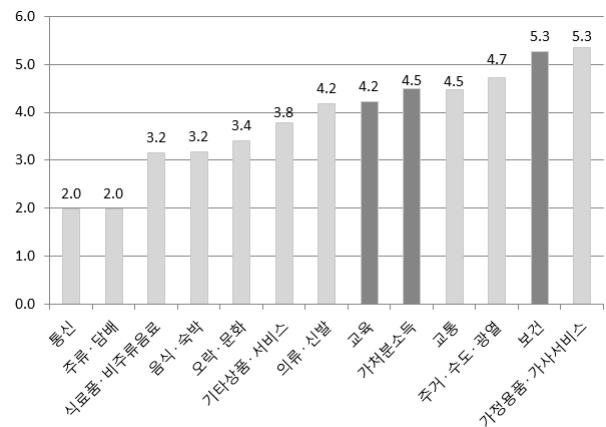
- 소비 항목별로 볼 때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자녀 교육비 및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역시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원인
-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비중은 8~10% 내외를 차지하며 소비 지출에서 주요국보다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
 - * 우리나라 가계의 최종소비 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은 6.7%를 기록, 미국(2.4%), 일본(2.2%), 영국(1.5%), 독일(1.0%)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(OECD, '12)
- 특히 '03~'13년간 40대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평균 14%를 자녀 교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 40대 가구의 자녀 교육비 지출 비중(2.1%)의 약 7배에 달함 (한국개발연구원, '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' '14)
- 고령화 진전에 따라 국민의료비 지출액 상승속도가 가처분소득 증가 속도를 크게 추월하는 가운데, 의료·보건부문은 5%내외에서 비중이 증가
 - * '03~'13년까지 10년간 의료비 지출(보건)은 연평균 5.3%씩 증가했는데, 이는 동기간 가처분소득 증가율 4.5%를 0.6%p 상회하는 수준
 - * 반면, 동기간 가처분소득 대비 오락·문화 및 음식·숙박 지출비율은 4.6%→4.1%, 10.7%→9.5%로 각각 0.5%p, 1.2%p씩 감소했는데, 이는 가계가 경직적 지출 증가에 대비해 선택적 지출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

< 소비 항목별 가처분소득 대비 비중변화(%) >



자료: 통계청

< 소비항목별 연평균 지출 증가율 비교(%) >



주: 기간: 2003~2013년

자료: 통계청

-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에 대한 설문 결과, 주택관련 부채 증가(30.9%), 자녀교육(27.9%), 사업 부진(25.5%), 의료비(6.1%) 순으로 조사
 - * 현대경제연구원('13) 설문 결과, 전체 응답자 중 24.6%가 '13년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6. 소비심리 위축 : 고령화

- 고령화에 따른 은퇴가구가 증가하면서, 고령층의 보수적 소비성향은 전체 가구의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
- '09년까지만 해도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7.4%로 39세 이하 청장년층(73.0%)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
- 그러나 고령층 소비성향이 꾸준히 감소하여 '08년 78.3%→'12년 71.7%로 감소, 청장년층 소비성향 74.6%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관찰됨
- * 청장년층의 소비성향이 급감한 '13년을 제외한 결과

< 연령별 평균소비성향 추이(%) >

구 분	청장년층(39세 이하)	50대	고령층(60세 이상)
2008년	73.0	71.8	78.3
2009년	73.0	73.1	77.4
2010년	76.6	73.3	74.9
2011년	76.7	72.8	72.6
2012년	74.6	69.5	71.7
2013년	71.6	70.7	72.3

주: 평균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 중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
 자료: 통계청

- 은퇴 및 노후 불안심리 확산 역시 최근 소비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
- 은퇴하지 않은 가구 대상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후준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5.1%가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다고 응답
- * 가계금융복지조사(통계청, '13), '노후생활에 대한 준비 정도' 설문 결과:
 잘 되지 않은 가구(34.3%), 전혀 준비 안 된 가구(20.8%), 잘 된 가구(7.2%), 아주 잘 된 가구(1.8%)
- 특히 최근 '기초연금제도 개정' 관련 논쟁은 개인의 은퇴 이후 재정문제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 은퇴자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더욱 확산시킴

IV. 정책적 시사점

-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 억제 및 기존 부채의 축소조정 유도를 통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여,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완화
 -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거비·교육비·의료비 등 각 지출항목별 미시적 대책 필요
-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규제 완화 및 시장개방을 통해 투자가 증가하여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가 살아나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유도 필요
 - 투자 증대 → 고용창출 → 소득개선 → 소비증진 → 시장확대 → 투자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
 -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입에 의존한 소비가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 부실을 유발하는 등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
-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담당하되, 정부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의 규제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 역할 담당
 -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만 우리나라가 취약한 의료·법률·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
 -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
- 소비 부진의 구조적·심리적 원인을 고려하여, 대중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정책 대응이 필요

참고문헌

- 권규호·오지윤, “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”, 2014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, 한국개발연구원, 2014.
- 김민정, “평균소비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과 시사점”, 통권 561호, 현대경제연구원, 2013.
- 나승호·정천수·임준혁, “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및 정책과제”, 한국은행, 2013.
- 배병호·손민규·정원석, “최근 소비부진과 가계의 시간선호 변화”, 한국은행, 2014.
- 서정의 외, 「금융안정보고서」, 한국은행, 2014.
- 신동진, “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”, 경제현안분석 제82호, 국회
- 이은미 외, “소비부진 진단과 대책”, CEO Information 제845호, 삼성경제연구소, 2012.
- 전승훈·신영임, “가계의 소비구조, 소비불평등,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”, 국회예산정책처, 2009.예산정책처, 2013.
- 이은미, “연령별 소비구조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”, SERI 경제포커스 제394호, 삼성경제연구소, 2012.
- 최성근, “소비 부진의 요인별 분석과 경제적 파급영향”, 통권 581호, 현대경제연구원, 2014.

